



맞춤농정, 말은 근사하지만...



농업정책연구소장
이헌목(李憲穆)

금년 초 정부는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농업* 농촌*농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안으로 “맞춤농정”을 들고 나왔다. 그간의 농정이 우리 농업 전체의 성장과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평균농가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기준을 적용해온 결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다양한 농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가 유형별 또는 개인 농가별로 정책 목표와 수단을 달리하는 “맞춤농정”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즉, 농업성장이 가능한 전업농과 준 전업농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과 마케팅, 기술교육 등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농규모의 확대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업농으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소득불안을 완화하는 제도를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성장이 어려운 중소농과 영세농에 대해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업과 농외 소득정책,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맞춤농정의 기반이 되는 농가별 소득 및 경영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가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춤농정팀을 설치하고, 기존의 정책사업 중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업을 맞춤형 농정체제에 맞추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농가 유형 또는 농가별 특성에 맞춰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농가단위로 부족한 소득을 채워주는 제도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의 ‘아심찬’ 계획을 듣는 일반국민이나 농민들은 “때늦은 감이 있다.”며 반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좀 더 찬찬히 들여다 보면, “맞춤농정”이란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전체 농가를 전업농, 준전업농, 중소농, 영세농 등 겨우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정책을 그룹화하는 정도를 “맞춤농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용어에서부터 의문이 든다. 시중에 파는 싸구려 옷에도 XXL, XL, L, M, S 등으로 네댓 가지 사이즈가 있고, 색깔과 디자인이 다르지만 아무도 맞춤옷이라고 하지 않는다. 120만 농가를 4개 유형으로 나누면 한 유형에 평균 30만 농가가 된다. 유형이 같다고 해서 모든 농가를 똑같이 지원할 수는 없을 테고, 유형 내에서도 우선 지원 농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지금 방식과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의 농정도 ‘맞춤’이라는 말만 쓰지 않았을 뿐 사업별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었고, 자격요건에

맞는지를 “엄격히” 심사하여 해당되는 사람에게 한하여 지원을 했었다. 자격요건을 세밀하게 정하면, 정부가 구분하고자 하는 4개의 농가유형보다 훨씬 세밀하게 농가를 구분하여 “맞춤농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복지원, 불필요한 지원이 걱정된다면, 자격요건을 그렇게 정하면 얼마든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형평문제 때문에 정책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든지, 그나마 정해진 자격요건을 엄정하게 심사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는 바람에 너도나도 대상자라며 신청을 하거나, 청탁으로 잘못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된 게 아니겠는가?

둘째, 개별농가의 소득 및 경영특성에 맞게 농가의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하거나,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가등록제를 도입하는 것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 하면, 비록 농가등록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각 농가의 금전적인 거래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기 전에는 각 농가의 정확한 소득상황을 알 수 없고,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를 근거로 ‘부족한 소득을 세금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농가등록제를 과세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농가별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여 “농가별 맞춤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설사 개별농가의 여건에 맞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이들 농가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을 높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다.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원으로 각자

의 농업생산성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이 떨어져 오히려 소득이 낮아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개별농가가 아무리 규모화 된다고 하더라도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단순히 농업생산소득만으로는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통 및 가공소득을 농민소득으로 하고, 새로운 수요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도 모두들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를 농민 개인이 풀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는 점이 문제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요약해 보면, 유형별 맞춤농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농정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농가별 소득 및 경영사정에 맞춰주는 맞춤농정은 농가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농가별로 맞춤농정을 펼 수 있는 현장의 ‘정책재단사’도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부적으로 “맞춤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농가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진전된 농정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를 마냥 깎아내리고, 새로운 방식이 문제를 다 해결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설사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구상하는 그런 유형의 “맞춤농정”으로는 지금의 농업*농촌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는 점은 근본적인 문제점이다.